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별지 목록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 ○○○, ○○○,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가합53277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위 각 대출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제4면 제3행의 '대출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같은 면 제7행의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비용 및 인지세 등의 비용'을 '대출관련 부대비용'으로, 같은 면 제11행에서 제12행의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대출관련 부대비용'으로, 같은 면 제13행에서 제14행의 '위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대출관련 부대비용'으로, 제5면 제1행의 '인지세나 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등'을 '대출관련 부대비용'으로, 같은 면 제21행에서 제6면 제1행의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을 '대출관련 부대비용'으로, 제8면 표 아래 제3행의 '위 표준약관'을 '개정 표준약관'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로, 제9면 제11행의 '20111'을 '2011'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5행의 '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8행부터 제19행의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같은 면 제20행의 '2008. 2. 11.등'을 '2008. 2. 11.'로, 제12면 제16행의 '별지 2 목록 기재 해당 금원'을 '별지 2 목록 중 청

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제13면 제7행의 '2 목록 기재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2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14행의 '만약'을 삭제하고, 제15면 제6행부터 제24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이 항에서는 ‘원고들’ 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대출관련 부대비용 부담이 약관에 기초한 약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1) 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은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것으로, 상대방이 피고와의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그 제시된 선택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이 말하는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다만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부담주체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선택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개별적 교섭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 내용이 원고들이 피고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후 개별적 교섭 또는 흥정을 거쳐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서 제시된 제한적인 선택 항목에 구속되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 원고들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 자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개별·구체적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 중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원고들을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로 표시한 대출거래의 경우,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약관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선택사항은 물론 이와 다른 내용으로의 약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적 교섭을 거

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후 그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선택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는 그러한 개별적 교섭을 당연히 예정하거나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개별적 교섭을 거쳐 원고들을 그 부담주체로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들 중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선택사항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개별적 교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주장과 같은 개별약정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서 나타난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전후의 사정,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구 약관규제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을 폐지하고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전국은행연합회가 2002년 12월경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이 사건 표준약관에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있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경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 등을 받고,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에 따라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절차를 거쳐 비용별로 부담자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는 취지로 이를 개정한 뒤, 2008. 2. 11.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을 하였다.

다)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표준약관 제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은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행정적인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행정적인 조치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규정은 이러한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과는 별도의 절차적 요건과 법적 효과 등을 정하고 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을 개정 표준약관으로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 것도 이러한 표준약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만을 비교하여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장래를 향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리고 이 사건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의 구 표준약관에서는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은 이를 개선하여 고객이 전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약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 표준약관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고객이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따라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대출관련 부대비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	----	-----

	판사	이현우
--	----	-----

	판사	김동완
--	----	-----

목록 1

원고들 명단

이하 생략